안종신 수석부총무
(주)도화구조 소장/dopian01@do-hwa.co.kr

행자부, 전국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도권 건설공사장 15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4개소가 66건의 사항에 대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11월 1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도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적발된 안전관련 제규정 및 안전수칙 위반사례는 △책임감리자 미배치와 감리자의 현장 이탈 △동바리 상하단부 미고정 및 횡방향 부재 미시공 △철근 피복두께 부족 및 설계도면과 다른 철근 배치간격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로프 미장착 △낙하물이나 추락 방지시설 미흡 등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6일 열리는 시·도 재난관리관계관 회의를 통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동절기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총리실, 건교부, 노동부 등 건설현장 관련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시공 및 감리자에 대해 엄중 제재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지난달에만 각종 건설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시설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키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관리주체별로 시설물의 점검·보수보완 작업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시행케 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11월 4일 막대한 건설재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지자체 등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시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기본계획안을 제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술의 연구·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안전관리체계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관련 기준의 작성·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준을 조정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정립하는 방안과 시설물 생

애주기체계의 구축기반조성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키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를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해 현황 및 투자실태를 5년마다 조사·활용, 생애주기비용예측기법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준 합리화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안전관리도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유지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또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확충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보수를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월 5일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열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돼있는 안전점검을 월 1회부터 연 1회까지 관리주체가 융통성있게 결정하고 2년에 1회 이상으로 돼있는 정기점검은 준공후 3~5년 부터 매 1년 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공용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준공 후 관리주체가 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해 실시하되 안전점검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실시토록 했다. 또 '시특법'에 의해 구분돼있는 1종, 2종 시설물을 재난·재해방지의 중요도와 관리주체의 능력 등을 감안,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2종 시설물의 경우 법정기준 내에서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별 내구연한 추정모델을 개발해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정·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별 내구연한 기준을 추정, 3년 또는 5년 주기로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안전·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설계단계에서 LCC기법을 도입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방안과 시공중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등 기준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수 보강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기준을 정립키로 했다.

또 시설물의 원상회복 보수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 등 유지관리의 범위를 감안,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시특법을 개정·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점검·진단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등 진단보수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기술자 자격시험에 안전점검·진단, 보수·보강, LCC예측 등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업체가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진단 대가를 현실화, 관련산업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생산 프로세스 등을 분석해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축정보관리시스템 건설산업행정시스템 등과 연계·운용하는 등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단기개선 과제, 정책연구 과제, 기술개발 과제, 장기발전 과제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되 기술개발과제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관리 주체와 산·학·연도 참여, 성과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